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자치단체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오늘의 인류에게 부과된 명제는 금년 가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를 앞두고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경제적 활력, 환경의 질,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의 상호 관련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개념으로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현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게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극히 부분적인 정책에 한정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개념을 통합정책화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인 <유엔의제21>의 제28장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에 게재되어 있는 활동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관리자인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어서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지역단위의 지방의제21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149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완료하였고, 48개 자치단체는 수립중에 있다. 지방의제21실천기구인 158개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녹색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제21추진 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기구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국제추진기구인 ICLEI에 가담하므로 국제적인 교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희망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있는 내실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실이란 ①행동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실천주체인 시민, 기업, 정부의 대등한 협력관계인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졌는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정보공개가 적정한가 ②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자치를 가능케하는 권한이양과 함께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기술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등이 점검되고 확보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2002년도 중점사업은 6만여명의 각양각색의 이익집단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금번 WSSD에 보다 많은 자치단체대표들이 참가해서 경험을 나누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게 하는데 두어야 함을 건의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크게 갖는다.